

오피니언

월/요/광/장

이 정 록



21세기 기업경쟁에서 강조되는 개념 중의 하나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다. 그리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중시되면서 등장한 용어가 '기업시민'이다. 기업도 일반 시민과 같이 사회 일원으로 지역과 국가 발전에 공헌할 책임이 있고,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선량한 기업시민의 책무를 다해야 한다는 논리다.

'기업시민' 광양제철소의 고민

미국 포춘지는 매년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을 뽑는다. 선정된 기업들은 예외없이 활발한 사회공헌활동을 하고 있다. 환경, 어린이, 지역사회협력, 교육 등을 지원하는 월마트의 '좋은 사업'은 월마트를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으로 만들었다. 우리 기업 또한 예외가 아니다. 최근 SK그룹은 울산 도시에 110만평의 '울산 대공원'을 조성해 울산시에 무상으로 기부했다. 1천여 정도가 투자된 공원은 뉴욕 센트럴파크보다 약간 넓은 규모로 울산의 명물이 되었다. 계열사와 외주 파트너를 포함해 120여개의 공장에 1만 5천여명을 고용하고 있는 삼성광주전자 또한 다양한 지역공헌활동을 통해 광주의 연고기업이라는 인식을 심으려고 애쓰고 있다.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 사회공헌활동을

장 건설하다. 연관회사를 포함해 제철소와 관련된 고용인구는 약 1만5천400명으로, 광양시 경제활동인구의 16%에 해당한다. 부양가족 기준으로, 광양시 인구의 약 35%가 광양제철소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제철소 덕분에 중·고교 교과서에서 '철강도시'라는 새로운 도시 이미지도 소개됐다. 마을을 지원하고 봉사하는 자매결연사업은 우수한 기업의 벤치마킹 대상이 됐다. 최근 광양제철소는 세계 제일의 자동차 부품 전문제철소를 지향하

는 비전을 선포해 새로운 도약을 꾀하고 있다. 비전이 달성되면, 효과는 고스란히 지역사회로 되돌아온다. 따라서 제철소가 지역발전에만 치중하고 있다면, 이해관계자 집단 간 차이가 있다고 해도 대다수 지역주민들은 제철소 경영활동에 적극 협조하는 것이 순리다. 기업유치를 위해 지자체 간 경쟁이 치열한 오늘날의 추세를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 그래야 제철소가 제공하는 고용과 세수효과를 포함해 지역협력활동의 이익을 누릴 수 있고, 지속적인 도시발전도 꾀할 수 있다. 실제로 그동안 광양제철소는 선량한 기업시민의 역할을 충실히 한 것이 사실이다. 광양은 물론이고 광주·전남에 많은 재

정적 지원도 했다. 그래서 제철소는 지역사회에 더욱 섬세할 것이다. 그렇다면, 지역주민들이 제철소 경영활동에 비우호적이고 방관자적 태도를 보이는 배경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 보아야 한다. 그리고 그 해답을 제철소 내부에서 찾아볼 필요가 있다.

제철소의 지역협력활동이 기업이익의 추구와 기업 이미지 향상을 위한 수단은 아니었는지 되돌아보아야 한다. 지역사회와 주민을 위해 청지기(stewardship) 자세를 취했는지, 우리가 지역을 위해 이렇게 투자를 했는데 무엇이 불만이나는 시혜적인 입장은 아니었는지 반문해 봐야 한다. 선량한 기업시민으로서의 책임이 아닌 전략적 차원의 기업시민 활동은 지역민의 이목을 집중시킬 수는 있지만, 지역민의 마음을 사로잡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광양제철소가 없었다면 오늘날의 광양시와 광양권부두,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제철소가 광양만권 발전과 공업화에 미친 영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러나 제철소를 '우리 기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이것이 기업시민 광양제철소의 고민이다. <전남대 교수·대한지리학회장>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 설

또 터진 학교비리 의혹...신속히 규명하라

광주 교육계에서 또 비리 의혹이 불거졌다. 한 신설 사립중학교 교장 등이 기자제 및 비품 납품 선정업체로부터 2천500여만원을 받았다는 것이다. 또 해당 교육장은 이 학교의 학교운영위원장 선출과 직원 채용과정에서 인사청탁을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경찰과 사립학교교육청의 감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당사자들이 부인하고 있는 현실에서 사실 관계를 판단할 수는 없으나 의혹이 제기된 사실 자체가 광주 교육계의 수치다. 정부와 교육기관 등은 비리가 터질 때마다 비리 척결을 수없이 다짐했지만 비리는 '독버섯'처럼 끊이지 않았고, 소문으로 떠돌던 비리가 사실로 드러난 경우도 적지 않았음을 부인할 수 없다. 교육계에선 비리의혹이 오는 10월 광주시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폭로된 점을 주목하고 있다. 실제 인사청탁 의혹을 받고 있는 교육장은 유력한 후보중의

한 명으로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면 도덕성에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의혹 제기가 선거 때마다 되풀이되는 폭로전의 서막이 아닐까 하며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이다. 시민들은 벌써부터 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는 교육감 선거의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광주 교육을 책임지는 교육감 선거가 폭로전과 흑색선전이 난무하는 '진흙탕 싸움'으로 진행되어서는 후유증이 수백에 없다. 당선자와 후보자가 사정 당국의 수사를 받는 상황이 올 수 있고 광주 교육계가 다시 전국적으로 망신을 사는 사태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경찰과 시교육청은 수사 및 감사를 통해 하루빨리 진실을 밝혀내야 한다. 당사자 간 '진실게임'에만 맡겨서는 과하다면 비리 의혹은 충분히 규명할 수 있다고 본다. 수사 결과, 비리 관련자들은 엄정히 처벌해야 할 것이다.

지방건설 죽인 '8·31 대책' 보완 시급하다

8·31부동산 종합대책이 발표된 지 내일 모레면 어느덧 1년이 된다. 8·31 대책의 지난 1년만에 대해서는 성공적이란 평가와 함께 실패한 작목이란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 같은 논란 속에서도 8·31 대책이 지방건설 경기를 침체에 빠뜨렸다는 데는 정부나 시장 모두 인정하고 있다. 특히 지난 1년간 지방 주택시장은 수도권과 똑같은 수요 억제정책의 낱말로 고사 상태에 빠져 있다. 지방의 아파트 초기 분양률이 10~20%에 그치고 주상복합 아파트는 아예 분양을 중단한 사실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한마디로 8·31 대책이 불러온 지방건설경기의 침체는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근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변죽만 울리고 있으니 답답하다. 지난 25일 열린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지역무 공동도급 한도 확대, 공공건설 수의계약 금액 인상 등을 지역건설업체 활성화 방안으로 확정된 것

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는 다 죽어가는 지방건설 경기를 되살리기에는 역부족이다. 나눠먹기식 영세 건설업체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이다. 지방건설경기를 활성화하는 길은 고강도 부동산 규제를 완화해 민간건설을 활성화하는 길밖에 없다. 주택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보유세 완화나 집값이 안정된 지방의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억제제, 기반시설부담금의 도시 규모별 차등 적용 등 부동산 규제를 완화해 건설 수요 자체를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아무리 좋은 약도 신체조건에 따라 어떤 사람에게든 독약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일부 지역이나 계층의 투기를 잡기 위해 지방경제를 고사시키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는 말이다. 지금이라도 8·31 대책을 보완해 수도권과 지방간의 수급상황을 고려한 차등화된 부동산 정책을 펼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법조 칼럼

곽 중 훈



'소(小)법정', 언뜻 들으면 법원이 보다는 많은 법정을 확보하기 위해 기존 법정 규모의 축소할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크게 다르다. 우선 법대를 현저히 낮추었고, 판사와 당사자 사이의 간격을 줄였으며 쌍방 당사자들도 비스듬히나마 서로 얼굴을 마주할 수 있도록 좌석배치를 바꾸었다.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딱딱한 분위기에 눌려 하고 싶은 말을 제대로 할 수 없었던 기존의 법정에서와는 달리 더욱 편안한 마음으로 자유롭게 말할 수 있게 됐다. 반면, 재판부의 입장에서는 당사자의

제2인사부의 주재 하에 제2회 민사소법정에서 변론준비절차가 진행됐다. 먼저, 1심 변론결과를 원고대리인이 진술하고, 이어서 피고대리인이 항소 이유와 함께 1심에서 주장하지 않았던 새로운 주장을 추가했다. 곧바로 쟁점을 3가지로 정리한 다음, 각 쟁점별로 쌍방의 논쟁이 시작됐다. 다음은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나서서 관련 증거를 조사하면서 차례로 정리해 나갔다. 쌍방 소송대리인들 옆에는 당사자 본인 또는 실무 담당자가 배석, 수시로 부족한 부분을 보충함과 아울러 자신들의 입장을 해명했다. 종전의 판행과는 달리 쌍방 모두가 제출된 준비서류를 뒤적이는 일 없

'소(小) 법정' 서 재판 해보니...

말만이 아니라 그 표정이나 순간적인 몸짓까지도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새로운 법정이 마련된 것이다. 그동안 소송당사자에게 법정에서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없다', '재판내용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 수 없다'라는 점에 불만이 많았다면, 이제는 자신의 주장을 어떻게 하면 요령껏 설득력 있게 펼칠 것인가를 위해 고민해야 할 것이다. 사실 우리 법원이 구술심리를 강조하고 시형에 역점을 두는 이유는, 국민으로 하여금 쉬운 말로 자신의 주장을 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재판의 진행상황과 법률적 쟁점을 투명하게 함으로써 사법불신을 막는 것이다. 또한, 국민 개개인이 분쟁의 주체로서 재판결과를 예측하고 스스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게 해 주도록 권리의 권리를 돌려주자는 데 있다. 지난 22일 오후 3시 광주고등법원 3층에서는 소법정이 마련된 후 처음으로

이 말하고 듣는 일에 전념했다. 시선과 시선이 마주치고 서로 표정을 읽으면서 토론을 거듭한 결과, 분쟁의 실체가 그 속살을 내보이는 것 같았고, 결국 두 가지 법률적 쟁점으로 압축할 수 있었다. 서로 주장이 다른 나머지 사실관계를 밝히기 위해 집중적인 증거조사를 위한 변론기일을 지정하고, 쌍방 당사자에게 화해의사를 묻은 다음 변론준비절차의 종료로 선언했다. 그 과정에서 소송대리인들의 준비가 철저했고, 당사자들과 허심탄회한 의사소통을 이루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재판장으로서 심리를 마치고 소법정을 나서면서, 당사자와의 거리가 좀 더 가깝도록 좌석배치를 바꾸었으면 하는 바람과 함께 소법정을 통한 구술심리가 재판부나 소송대리인에게 많은 부담을 주지만 사법신뢰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여겨져 뿌듯한 마음을 금할 수 없었다.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공공 도서관 책상 낙서도배 기본적 에티켓 안 지켜서야

도서관을 이용하다보면 책상에 적힌 수많은 낙서를 볼 때가 많다. 거의 도배 수준이다. '기갈고사 D-10' '수능-잡 한숨자면 지방대', '어머님, 전 서울대 가겠습니다'같은 류의 낙서들은 그나마 낫다. 자기 연애사를 책상에 줄줄이 적어놓는다면, 휴대폰 번호에 심지어는 보기에 낯뜨거운 낙서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안되는 줄 알면서도 지우개로 지워보기를 할 때도 있다. 그 책상이 자신의 것이라도 그런 행동을 했을까. 공공 도서관은 우리 모두의 것이다. 아무 생각 없이 하는 일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매우 불편한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챘으면 한다. <이재진·광주시 북구 생생동

독자마당

점 백원 고스톱 안되고 수백만 원 성인오락실은 괜찮다?

현재 우리나라 법률상 도박은 철저히 금지되어 있다. 어느 정도로 엄격하냐하면, 대학생들이 하숙방에서 점 100원짜리 고스톱을 쳐도 처벌을 면할 수 없다. 내기당구, 내기골프 모두 도박이다. 실제로 고스톱 치다가 적발된 사람들은 예외 없이 처벌을 받는다. 정부가 형벌로 도박을 금하는 것은 사형심이 조장되어 요행을 바라게 되고 근로의 욕을 잃는 등 국민에게 해롭기 때문이다. 그런데 버젓이 정부는 빠치고, 슬롯머신, 바다이야기 등을 허가해줬고, 대한마사회를 세워 경마를 하고, 경륜도 하고 있다. 모두 도박이며, 대학생들이 심심풀이로 하는 고스톱 수준과 단위가 다르다. 이런 것들은 돈 있는 사람들이 여유로 하는 것이 아니라 넉넉지 못한 사람들이 증득

되어 온 재산을 다 털리고 가정파탄이 나고 급기야 도박자금 마련을 위해 범죄까지 저지르는 등 사회문제가 심각하다. 도박중의 도박이라 할 수 있는 카지노는 그 사행성의 강도로 인해 정부가 외국인전용카지노만 허가할 수 있으나, 폐광으로 정선 지역경제가 어려워지자 지역경제를 살리자고 내국인 출입이 가능한 카지노를 허가해주었다. 아무리 정선의 지역경제도 중요하지만, 카지노로 인해서 폐가망신할 국민들은 생각하지 않았던 말인가. 정부는 이제라도 위에서 언급한 모든 성인게임장을 없애고 경마, 경륜도 없애고 정선카지노도 없애야 한다. 만일 이런 것들을 없애지 않을 것이라면, 차라리 도박에 대한 처벌을 없애야 할 것이다. <최규호·최규호변호사법률사무소 대표

아파트 방화문 항상 닫아둬야

고층 아파트 계단에 설치된 방화문을 입주 주민들의 인식 부족으로 대부분 열어 놓고 생활하거나 관리자들 또한 수수방관하고 있어 화재시 큰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현재의 아파트 계단에 설치된 방화문의 경우 대부분 자전기, 박스 등의 물건으로 받쳐 놓거나 도어체크를 분리 또는 훼손되어 방화문을 열어놓고 있는 실정이다. 주민들은 "어둡고 답답해서 열어놓는다"며 방화문의 용도를 전혀 알지 못하고 있으며 열어두면 위험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불과 소수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현행법상 16층 이상의 계단식 아파트에는 방화문을 설치하고 항상 닫아 두도록 돼 있다. 방화문을 열고 생활하는게 얼마만큼 위험한 상황인가를 홍보하지 않으면 안 될

시기이다. 물론, 불이 상층으로 확대되지 않으면 무사하겠지만 지금은 발코니확장이 합법화되어 확대될 가능성은 그만큼 높아져 있다. 방화문은 화재감지기가 작동할 경우 자동으로 잠기는 문을 제외하고는 평상시 항상 닫혀 있어야 하고, 위반할 경우 소방시설 설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차로 3일 이내 보완할 것을 명령하고 그래도 지켜지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당장 불편할 지라도 불이 났을 경우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줄이는데 효과적인 만큼 방화문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 <한상수·영암구조대장

사용한 고속도로 카드 추첨행사 이벤트 참여하자

고속도로 카드나 하이패스 플러스카드를 이용해 통행요금을 지불하는 운전자들을 위한 경품 추첨 행사가 실시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운전자는 많지 않다. 고속도로카드 추첨은 한국도로공사가 지난 2000년 7월 7일 실시한 이후 매월 5일, 1회 실시하고 있는데, 한국도로공사 관할 유료도로를 통행하는 자동차 운전자가 통행료를 지불했을 때 기록되는 일련번호를 대상으로 한다. 전월 고속도로 카드와 Hi-Pass

카드 이용자들의 카드에 표시된 일련번호도 대상에 포함된다. 상품도 푸짐해 백만원 상당 상품부터 네가게이션·GPS·엔진오일·고속도로카드 등 모두 331명에게 경품이 지급된다. 사용 후 다 쓴 고속도로카드, 뜻하지 않은 행운에 당첨될 수 있으니 무심코 버리지 말고 꼼꼼히 챙기자. <국성아·한국도로공사 합평영업소

無 等 鼓

"사람이 일생동안 하는 여행 중에서 가장 긴 여행은 바로 '머리에서 가슴까지'(From head to heart) 이르는 것이다." 신영복 성공회대 교수가 지난 6월 장년퇴임을 앞둔 마지막 강의에서 한 말이다. 누구나 이상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이성이 혼돈과 몽매의 중세를 종식시켰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렇다고 해서 근대 이후 세상이 그 전보다 나아졌다고 단언할 수 있을까. 어떤 고매한 사상이나 논리도 인간의 체온이 섞이지 않았다면 의미가 없다. 신 교수의 말은 차가운 머리와 따뜻한 가슴을 병행해야 하는 인간의 필수 덕목을 한마디로 압축한 명구다. '감옥으로부터의 사색', 1988년 출간된 이 책은 '신영복'이란 이름을 우리에게 각인시켰다. 감옥은 근본적으로 강자의 폭력이 관철되는 만인 대 만인의 투쟁현장이다. 인간을 경멸하게 만들고 중요한 짝을 키운다. 그러나 신영복의 글은 그런 감옥살이와 달랐다. 봉합염서에 써내려간 그의

강욱 편지는 절제된 문체 속에 담긴 깊은 성찰로 사람들의 심금을 울렸다. 그래서 그의 수상(隨想)은 파스칼의 '팡세'나 몽테뉴의 '수상록'에 비견된다. 1968년 터진 통일혁명당 사건은 20대 후반의 젊은 경제학도에게 가혹한 시련으로 다가왔다. 서울대 상대·대학원을 졸업한 뒤 육사에서 강사를 하고 있던 신영복은 통혁당 사건에 연루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박정희와 정주환의 무자비한 독재가 끝난 1988년 8·15 광복절 때야 가석방으로 석방됐다. 이후 그는 성공회대 사회학부 교수로 17년을 보냈다. 그가 지난 26일 정년퇴임식을 가졌다. 콘서트 형식으로 치러진 퇴임식은 '잔치' 같은 분위기였다고 한다. 소설가 조정래 씨는 "그와 동시대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참으로 축복"이라고 말했다. 이런 말을 듣고 사는 신영복이야말로 인생의 길에 여행에서 성공한 사람이 아닐까. /오주승 정치부장 jsoh@kwangju.co.kr

신영복



Table with 2 columns: Kwangju Ilbo and The Kwangju Ilbo. Includes contact info, subscription rates, and address.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만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고료 지급합니다.